

가상자산시장 독과점 도마위... “중소거래소 진입문턱 낮춰야”

업비트, 시장 점유율 60% 육박
가상자산위, 이달 중 키포프 회의
업계 “경쟁 통해 독과점 해결해야”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시황판에 비트코인 판매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의 독과점 문제가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기 위해 ‘가상자산위원회’ 출범을 예고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야 거래소 간 점유율이 고르게 퍼질 것이라 의견이 나오고 있다.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가상자산위원회 키포프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책·제도 자문기구로 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는다.

금융당국은 15명의 위원 중 정부 측(금융위·기획재정부·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위원 6명과 민간 전문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가상자산위원회가 나오게 된 배경은

업비트 때문이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시장 독점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의 예수금과 매출액, 수수료 등이 모두 70%를 넘어 이미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이다”며 “금융위가 한 업체만 살리고 다른 업체를 죽이는 ‘오징어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업비트의 시장

독점 해소 방안을 적극 요구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시장 구조적 문제나 독과점 이슈는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에서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면 독점, 3개 사업자 점유율이 70%면 과점으로 보는데 업비트는 현재 시장점유율 59%를 기록하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 2020년 상반기부터 빚썸을 제치고 줄곧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매출은 해마다 연간 1조원을 넘기고 있다. 타 거래소들의 경우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하락장)에 따른 거래량 감소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업비트 독과점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가상자산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는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 독점 문제를 해

결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했다. 법인 고객이 증가하게 되면 여러 거래소에 대규모 자본이 고루 투입되기 때문에 독과점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파생상품과의 연계 등을 허용시켜 시장에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소와 은행 간 실명확인계좌 개설을 통한 중소거래소의 시장 진입 허용도 독과점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부정적 태도와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림자 규제’로 거절당해 왔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독과점 이야기가 지난 2021년부터 나왔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던 것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다”라며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 시장진입 허용이나 중소거래소 실명계좌 허용 등을 통해 경쟁구도가 생겨난다면 가상자산 거래소 독과점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노태우 일가 증여세 편법 의혹 강민수 “법원 확정 후 과세 가능”

〈국세청장〉

2024 국정감사

기재위, 세수입 결손 등 여야 격돌
문다혜씨 주택자금 탈세 의혹도 제기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고(故) 노태우 씨의 비자금조성 및 편법증여(또는 사후 상속)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국세청이 과세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노태우 씨(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300억 원의 비자금을 증여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국세청 방침을 따져 물었다.

이에 강 청장은 “사실관계 확정이나 부과제기간(과세기간) 특례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3심에서 확정돼야만 움직일 수 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노태우 씨가 노소영 씨에게 증여한 300억 원에 33년간의 물가상승분을 적용하면 올해 기준 796억 원으로 환산되고 증여세가 44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 증여세 246억 원 대납,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102억 원까지 합치면 증여

세 추정치가 420억~66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강 청장은 “세무조사나 검증은 하는 입장에서, 기존의 재판이나 검찰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그런 내용의 입법이 되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노 씨 일가의 편법증여 의혹과 관련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지금 출처 조사 등을 나갔을 때 금융·증빙 자료의 보관 기간을 넘어서면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주택자금 탈세 의혹도 제기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문다혜 씨가 양평동 주택을 2019년 5월 7억6000만 원에 매입해 2021년 2월 9억 원에 매각했고, 당시 주택 매입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운을 폈다. 이어 “당시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 태국 현지 업자를 접촉해 국내로 원화를 들였다”며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라며 세무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강 청장은 “세금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면 (국세청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세수입 결손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지난해 56조 원 규모의 이른바 ‘세수 핑크’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30조 원대 핑크가 예측되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국감장 업무보고를 통해, 고액 체납·불복 대응 강화 등을 연말까지 다각적인 세수 조달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감장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꼭 해야하는 9가지 경험

인천 9경

- 1883년 개항장 과거로 시간 여행 떠나기
- 월미바다열차 타고 낭만가득 월미도 즐기기
- 도심 속 포구, 소래포구에서 생태자연 즐기기
- 아경명소 계양 아래에서 빛의 거리 구경하기
- 송도센트럴파크에서 미래도시 산책하기
- 영종 씨사이드파크에서 바닷길 따라 레일바이크 타기
- 강화읍 원도실에서 도보 탐방하기
- 인천 삼형제 섬, 산사모도 일주하기
- 우리나라 최북단 백령도에서 천연기념물 물범 만나기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 인천관광공사 Incheon Tourism Organization